

# 오늘의 주요기사

2023 2 28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9	[ ]		18
강원도민일보	19	[ ]		19
江原日報	19	[ ]	,	20
江原日報	19	[ ]	가,	21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23



도의회 횡성 화재현장 방문 권혁열 강원도의회의장, 심영곤·한창수·박기영 상임위원장, 지광천·최규만 의원 등이 27일 횡성 우천면에 위치한 공장 화재현장에 방문, 피해업체 임직원을 격려했다.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2023 02 28 ( )  
11

## 江原日報

# “육가공공장 조기 정상화 적극 협조”

도의회 횡성 화재 현장 방문  
유관기관 대책 논의 약속

【횡성】속보=강원도의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 우천농공단지 육가공공장(본보 지난 20일자 5면, 24일자 2면 보도) 조기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

위원장과 지광천 부위원장, 최규만 도의원 등은 27일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장,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등과 함께 (주)케이프라이드(K-Pride) 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실태를 둘러봤다.

권 의장은 “케이프라이드가 제2도약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화재라 더욱 안타깝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 하루빨리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케이프라이드 CEO는 “공장 기초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봤을 때 재건축 수준의 복구에는 15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당장 필요한 30억~50억원의 자금이 조속히 해결돼야 회사의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케이프라이드는 경기 이천에서 창업 후 2014년 9월 1차 이전했다. 유학렬기자

江原日報

2023 02 27 ( )

## “횡성 화재 육가공 공장 조기 정상화 적극 지원”

도의회 27일 횡성우천농공단지 케이프라이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 방문



권혁열 도의장 일행이 27일 횡성우천농공단지 케이프라이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김숙자 횡성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횡성 속보=강원도의회가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 우천농공단지 육가공 공장(본보 지난 20일자 5면.24일자 2면 보도) 조기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장 일행이 27일 횡성우천농공단지 케이프라이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김명기 군수 등과 함께 김도영 CEO 등 회사 실무진으로부터 향후 대책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권혁열 도의장과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과 지광천 부위원장, 최규만 도의원 등은 27일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장,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등과 함께 (주)케이프라이드 가공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실태를 둘러봤다.



권혁열 도의장 일행이 27일 횡성우천농공단지 케이프라이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김명기 군수 등과 함께 김도영 CEO 등 회사 실무진으로부터 향후 대책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권 의장은 “강원도 유망업체인 (주)케이프라이드(K-Pride)가 제2도약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화재라 더욱 안타깝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 하루빨리 공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케이프라이드 CEO는 “공장 기초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봤을 때 재건축 수준의 복구에는 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당장 필요한 30억~50억원의 자금이 조속히 해결돼야 회사의 어려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권혁열 도의장 일행이 27일 횡성우천농공단지 케이프라이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김명기 군수 등과 함께 김도영 CEO 등 회사 실무진으로부터 향후 대책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주)케이프라이드는 경기 이천에서 창업 후 2014년 9월 1차 이전 후 완전 이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35억원을 투자해 건물 증축과 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고 이달 20일 신축 개장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오전 4시41분께 화재가 발생(본보 지난 20일자 5면 보도)하며 기존 건물 5,811㎡와 신축 건물 2,482㎡, 시설, 설비를 비롯해 원재료와 가공품 등 3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고 있는 케이프라이드는 직원 300명에 2021년 57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3 02 28 ( )  
23

## 강원도민일보

# “글로벌 강원특별자치도 도약 여성 역량 발휘할 것”

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취임식  
안정희 신임 회장·임원진 소개  
김진태 도지사 등 200명 참석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가 27일 안정희 제42대 회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도여성단체협의회는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김진태 지사 부부, 권혁열 도의장, 허영 국회의원 부부, 30여개 여성단체 회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여성계 인사, 이건설 도노인회장, 흥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용욱 농협강원지역본부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전금순 회장 이임식 및 안정희 회장 취임식이 27일 춘천 미래컨벤션웨딩홀에서 열렸다. 안정희 회장과 내빈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서영

가졌다. 4년만에 바뀐 회장 취임과 함께 최선녀·김성옥 부회장, 이영자·박정숙 감사 등 새 임원진들도 이날 인사했다.

안정희 신임 회장은 “그간의 단체 업적에 누가 없도록 양성평등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글로벌한 지역으로 자리잡는데 큰 힘이 되도록 여성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명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추구해 온

공동 목표는 ‘공평한 대한민국’이다. 강원여성단체들이 강원도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 전국 회원들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임한 전금순 40·41대 회장과 전직 임원진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진태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치있는 힘을 만들어달라”고, 권혁열 도의장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허영 의원은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이젠 히스토리가 아닌 ‘허스토리’로서 역사를 꾸려나가도록 리더십을 만드는 단체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식전에는 전자현악그룹 ‘라피네’와 팝페라가수 장진호의 축하공연도 열렸다. 강주영

2023 02 28 ( )

# 江原日報

## “무조건 추진한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때부터 ‘오색케이블카 무조건 추진’ 약속  
김진태 지사 조기 추진 공약 후 윤 대통령, 정부 찾아 적극 세일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도내 국회의원, 도의회 한 목소리  
양양군민 비롯 지역사회 규탄 대회, 서명 운동 펼치며 민심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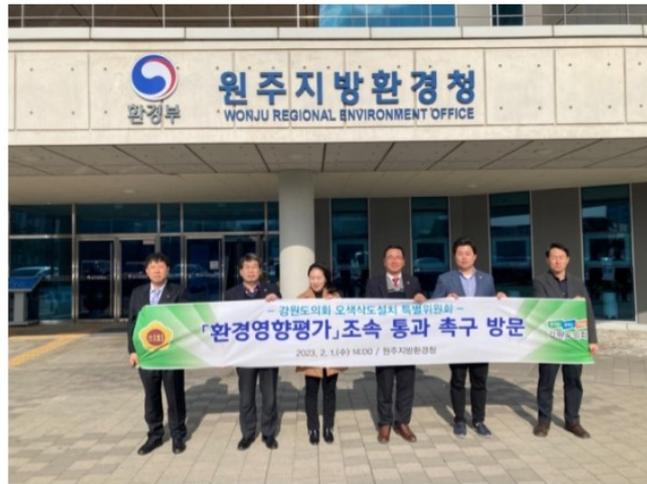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무조건 추진’을 약속하며 양양군 일대에 내건 현수막

41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지자체, 정치권, 지역사회의 공조가 더해져 이뤄낸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7대 강원 공약에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영하고 ‘무조건 추진’을 약속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담아냈다.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는 이어졌다. 지난해 말 김진태 지사로부터 연내 환경 협의 마무리 요청을 받은 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언급, 힘을 실었다.

김진태 지사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공약하며 숙원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정부 부처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다.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권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춘천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원권 현안으로 담아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의 노력에 도내 정치권의 지원 사격도 더해졌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2015년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대선 공약 반영에 힘썼다. 강원도의회는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냈다.

양양군민을 비롯해 지역사회도 끊임없이 민심을 표출했다. 양양군민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오가며 항의집회를 펼치면서 지역의 여론을 전했다. 시·군·번영회연합회와 도민회중앙회도 1만5,0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힘을 보탰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14

## 평창역역세권발전협의회 창립 '신도시 건설 힘 모은다'

### 의료센터·건강타운 조성 추진

강릉선 KTX 평창역 주변의 발전을 위한 평창역역세권발전협의회 창립 총회가 27일 오전 서울대 평창캠퍼스 강당에서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협의회를 발족, 평창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에 김낙운 전 군의장과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특별자문위원으로 최종수·지광천·도의원,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이창영 군변영회장을 위촉했다.

이날 창립한 협의회는 지난 2012년 원주~강릉 KTX 건설공사 초기에 평창역역세권발전협의회를 구성, 당시 편입토지 보상문제와 평창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활동이 중단됐다가 이날 재창립했다.

협의회는 창립에 이어 앞으로 평창역 주변의 경관과 환경정비로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 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평창역 상징표지석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평창역 주변에 추진돼 오고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센터 건립과 스마트건강타운,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등의 조성, 평창군에서 매입한 군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 용평면 장평리와 서울대 평창캠퍼스를 연계한 신도시 건설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신현태

# 강원도민일보

##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8만명 염원 전달

범시민추진단 시민서명운동  
7만7769명 동참 목표 2배  
도교육청 찾아 서명부 제출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향한 원주 시민들의 염원이 간절하다.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추진단은 27일 강원도교육청을 찾아 원주 유치 희망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시민 서명은 7만 7769명 분으로 무려 8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1월 범시민추진단이 출범하며 목표로 한 3만명의 두배를 훌쩍 넘어섰다.

이날 시민 서명 전달 현장에는 원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펼쳐져 눈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 범시민추진단 및 원주지역 사회단체가 27일 도교육청을 찾아 시민 7만7769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길을 끌었다. 원주권역별 학부모회 연합회, 시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범연합대,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 피켓 퍼

포먼스 등을 통해 원주 유치 당위성을 강력 피력했다.

여기에 김기흥 도의회 부의장과 전찬성 도의원, 김지현·김혁성·손준기 시의원이 동참해 원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 힘

을 실었다. 앞서 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 타지에서 활동 중인 원주 연구 단체들이 연일 원주 유치 희망 성명 발표 등을 이어가며 유치 열기를 높여왔다.

김정운 이·통장연합회 시지회장은 서명부 전달에 앞서 건의문을 통해 “학부모회연합회에서 시작한 유치 활동이 지역사회 공감을 얻어 8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가 뜨겁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접근성 좋고 고른 관련 인프라로 연계 교육이 가능한 원주에 설립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8일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지역을 결정·발표할 계획이다. 권혜민 khm29@kado.net

# 江原日報

## “힘내라 경제 달려라 관광”

### 화천군

‘힘내라 화천경제, 달려라 화천관광’을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레이스를 펼친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화천군과 화천군체육회가 주관·후원하는 화천군민 건강달리기대회가 3월1일 오후 1시 화천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화천우체국 앞에서 출발해 절산 앞 우회도로~충렬탑~실버복지센터~용신교~정보산업고를 거쳐 군청으로 돌아오는 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군·가족 단위 신청자 몰려 5km 뛰며 독립정신 계승

올해는 군장병을 비롯해 직장인들이 대거 참가 신청을 했으며 가족 단위 신청자도 몰렸다. 김진호 7사단장, 허행일 화천경찰서장, 박대현 도의원, 봉윤일 NH농협 화천군지부장 등도 레이스를 펼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3·1절 104주년을 맞아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발전을 응원하며 힘차게 질주하게 된다.

또 산천어축제를 성공 개최한 군민들의 힘을 지역 발전으로 이어 가는 화합의 장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녀 1~5등에게는 상품이 주어지고 3·1절 104주년을 기념하는 31등상, 104등상 등 다양한 시상을 준비하고 있다.

최문순 군수는 “애국충절의 고장인 화천에서 매년 3월 1일 뜻깊은 레이스가 펼쳐진다”며 “독립정신 계승은 물론 지역 발전을 염원하며 힘차게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장기영기자



고성군 군정설명·현안청취 간담회 고성군 2023년도 군정설명 및 현안청취 간담회가 27일 간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2 27 ( )

# [포토뉴스]고성군 2023년도 군정설명 및 현안 청취 간담회



2023년도 군정설명 및 현안청취 간담회가 27일 간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간부 공무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2 27 ( )

# 江原日報

## 영월 향교, 공기2574년 춘기 석전대제 봉행

28일 오전 9시 30분 영월향교 대성전에서 영월 영월향교는 28일 오전 9시 30분 영월향교 대성전에서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한다.

이번 석전대제에서는 초헌관에는 최명서 영월군수, 아헌관과 종헌관은 심재섭 영월군의장과 김길수 도의원이 각각 맡는다.

또 올해는 향교에서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등 문화재 활용 사업도 진행한다.

엄인영 영월향교 전교는 "우리나라 고유의 뿌리인 유교정신의 뜻과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16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철원 향교에서 열리는 철원 향교춘기석전제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12



심오섭(강릉) 도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강릉향교 대성전에서 열리는 강릉향교춘기석전제에 참석한다.

# 江原日報

2023 02 28 ( )

21

노인회 흥천군지회 정총

◇흥성기강원도의원(흥천)



은 28일 오전 10시 흥천크리스탈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2023

년도 (사)대한노인회 흥천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 江原日報

2023 02 28 ( )

21

◇윤길로강원도의원(영월)



은 28일 오전 11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는 영월군체육회장 취임식에 참석.

2023 02 28 ( )  
01

# 강원도민일보

## 오색케이블카 연내 착공, 강원도 40년 숙원 풀었다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통과

원주환경청 사업 추진 허가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도·양양군 인허가 신속 강조  
2026년 준공 목표 주민 환영

속보=강원도의 40여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오는 2026년 설치,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원주환경청은 27일 양양군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을 일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사업 추진을 허가한 것이다. 원주환경청은 이날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하며 조건부 동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과 앞서(평가서에) 누락됐던 공사 작업로와 헬기 이·착륙장 등 일시 훼손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동물상·식물상·토지이용지형·지질·경관·시설안전 등 5개 부문에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협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이 현실화되면서 도와 양양군은 나머지 11개 인허가 절차에 대해 신속처리를 통해 착공과 준공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착공 목표는 연내,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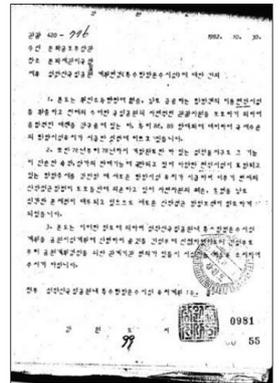
이와 관련,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겼는데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상으로 해결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장애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며 "남은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며 관련 부처와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강원도, 양양군과 한마음으로 남은 과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 처음

논의됐지만 환경 훼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난 41년간 지지부진, 여러 정권을 거치며 사업 부침을 겪었다.

앞서 2015년 말,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을 기점으로 보편환경협의에만 7년 이상을 소비한 것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당초(587억원) 보다 증액, 약 900억~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도와 양양군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곤돌라(1989년 허가·1998년 운영) 이후, 수십여년만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최훈·정승환

▶ 관련기사 2-3-17면·영상 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02

## “150만 도민의 승리” 민·관·정 각계각층 하나 된 노력 빛나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통과**  
김 지사 “연내 착공 약속 지킬 것”  
양양군수 “연계시설 행정력 결집”  
이양수 의원 “착공·완공 역량 집중”  
추진위원장 “명품 케이블카 총력”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담화문 발표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김진태(사진 가운데) 도지사, 김진하(사진 왼쪽)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이 담화문을 발표할 뒤 손을 붙잡고 인사하고 있다. 서영

지만, 여러 절차를 병행해 나가서 연말까지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오랜 기간, 이 사업을 추진해 온 3선 김진하 양양군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강원도민, 특히 우리 양양군민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수없이 많은 백지화 위기가 있었지만, 양양군민

은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처분과 반대단체의 극렬한 저항을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사람이 북적거리며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연계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며 “국가 시범사업에 걸맞은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구 의원인 이양수 국회의원은 “2번의 행정심판 승소(인용제결), 3번의 재판을 모두 승소 했을 때 더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더운 날 아스팔트에서, 추운 날 두 손 녹여가며 지역분들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한 시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2024년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 “2026년 오색케이블카 완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오색케이블카가 자연친화적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적인 명품케이블카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세훈·정승환

▶ 인터뷰 전문 kado.net

-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동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내용
  - 1 동물상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 통해 자립대책 시행
  - 1 식물상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
  - 1 토지이용, 지형·지질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강구
  - 1 경 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
  - 1 시설 안전대책 풍속, 적설 등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
- 5개 환경 전문기관,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재보완 검토의견)
  - 1 한국환경연구원(KEI) 멸종위기종 산양 보호 불가
  - 1 국립생태원 산양 및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 1 국립환경과학원 상부정류장 구역 범위 조정 권고
  -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위적 간섭으로 서식지 훼손 우려
  - 1 국립기상과학원 강풍피해 우려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02

## 2026년 준공 목표·인허가 절차 5개 속도 관건

절차 11개 중 6개 도·양양군 소관 김 지사 설악산삭도추진단 출범 약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앞당겨 추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정상화되면서 11개 인허가 절차 조기 해결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에만 7년 이상이 소요된 만큼 남은 나머지 11개 인허가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진태 지사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른 담화문 발표에서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원샷으로 해결해 연내 착공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또, “조지개편을 통해 도청 안에 ‘설악산삭도추진단’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양군과 도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착공일정은 내년 상반기였으나,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이 현실화되면서 착공 목표도 당겨졌다.

현재 남은 인허가 절차는 총 11개로, 관련 절차만 원활히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이 중 6개 인허가 절차의 허가권자가 강원도와 양양군이다.

도가 실질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은 5개 인허가 절차인 셈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는 올 9월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행안부),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산림청), 국립사육용기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양양국유림관리소), 특별건설기술심의(국토부)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11월

국립공원공단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낼 방침이었다.

이후 4개 인허가 절차의 경우 허가권자가 모두 양양군이라 사실상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사실상 마지막 인허가 절차다.

이 가운데 착공목표가 당초보다 2년 가량 앞당겨진 연내로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추진일정 역시 조금씩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기부터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은 올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로 목표로 지난해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상 행안부 사전당당성 조사 신청시기는 4월, 본심사 신청시기는 8월이었으나 군은 타당성 조사 신청시기를 3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절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 신청	▶ 2023. 3월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산림청)	▶ 6월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양양국유림관리소)	▶ 6월
지방건설기술(강원도) 및 특별건설기술 심의(국토교통부)	▶ 9월
하부정류장 관련리계획 변경(강원도)	▶ 10월
공원사업 시행허가(국립공원공단)	▶ 11월
궤도사업허가, 건축허가, 구거정용, 농지전용(양양군)	▶ 12월
공사허가 사전검토 및 계약심사	▶ 2024. 4월
착공 및 준공(목표)	▶ 연내 착공 노력 및 2024년 상반기 착공, 2026. 6월 준공

며 “3월까지의 사전당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승환

# 강원도민일보

## 정권마다 뒤바뀐 굴곡진 역사... 대선 단골공약 '종지부'

###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통과

1982년 당시 도지사 설치 건의 김 지사, 취재진에 첫 공문 공개 윤 대통령 임기 2년차 동력 확보 권성동 "환경·발전 모두 챙길 것"

"8번의 사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 그리고 16명의 강원도지사를 거쳐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지난한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  
강원 영북지역 40여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추진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역대 정권을 거치며 사업 추진과 중단, 재추진이 반복됐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굴곡진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982년 당시 강원도지사(김형배)가 중앙정부에 보냈던

### 오색 케이블카 추진일지

1982. 8~12	강원도 사업추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부결(2회)	2016. 11.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통보(원주지방환경청)
1995. 3.	오색지구 석도가설 구상계획 수립	2016. 12.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
2011. 3.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오색-대정동) 신청	2017.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2012. 6.	국립공원위원회 1차신청 부결	2019. 5.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 제출
2012. 11.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오색-관모농산) 신청	2019. 9.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
2013. 9.	국립공원위원회 2차신청 부결	2020.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부동의 통보 취소 인용
2015. 4.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오색-골향) 신청	2021. 4.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통보
2015. 8.	국립공원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	2023. 2.27	환경영향평가 통과



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하는 첫 공문을 김 지사에 내보이면서 "41년이나 걸렸다고 나왔다. 김 지사는 이 공문을 취재진 앞에 내보이면서, 154만 강원도민

과 함께 환영한다"며 "8번의 사발투쟁, 3번의 행정심판, 4번의 행정소송까지 우리 양양군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고, 이사업은 16명의 강원도지사를 거쳐갔다"고 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보수·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냈다가 발목이 잡혔다가 재추진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이 사업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단골 강원공약이었지만, 결국 '공약(空約)'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업을 강원공약으로 약속한 가운데 윤 정부 임기 2년 차에 재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됐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첫 추진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1982년 8월과 12월, 강원도는 3개·2개 노선을 건설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각각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에 자연공원 내삭도 설치·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거론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 설악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2곳이 사업지로 선정돼 사업 정상 추진에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공명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같은해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규정하고 조건부 가결 자체를 원점재검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원주환경청은 "산양에 GPS를 달아 제조사하러"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까지 내려 지역의 공분을 샀다. 양양군민 등 도민들은 그간, 대정부 투쟁과 행정심판·소송을 이어온 가운데 사업 추진 4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권성동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색케이블카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답대안 첫 걸음이다. 환경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박지은-이세훈

# 강원도민일보

## 사업비 최대 1000억원 추정... 환경단체 반발 변수

### 사업성패 어디에 달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조건부 동의'를 받았지만 최대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사업비 적기 조달 여부는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또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등 사업을 반대해온 환경단체 설득 역시 사업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본지 취재 결과, 2월 현재 양양군이 추정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는 900억~1000억여원이다. 2015년 설계당시 사업비는 587억원 수준이었지만, 물가 상승, 공법 변경,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했다. 1000억여원도 추정치다.

양양군 오색사도추진단 관계자는

"설계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이라 아직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되지 않았다"며 "1000억원보다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케이블카 설치 예산을 지방비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는 지난해 12월 초 보도자료를 내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 대상에 포함돼 2~3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비 투입배경을 밝혔었다.

또 "타지역 케이블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오히려 조기 준공해서 운행하는 것이 실익"이라고 판단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

서 "환경영향평가에 매진한 상황이었다"며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변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고, 환경부에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며 사업추진 반대행동을 예고했다.

박성윤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승인 부대조건으로 언급했던 멸종위기종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 경제성 등 향후 심사들에 대해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설화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03

## 국힘·민주 “환영” vs 정의 “환경파괴부”

### 지역 정치권 반응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 부동의’ 결정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정의당 도당은 “환경 파괴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유상범)은 2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임기 내 공약이행이 가능해졌다”며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한 윤 대통령과 김 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우영)은 “설악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국립공원의 환경 보존과 생태복원, 이동 약자의 자연환경 향유 기회 제공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상생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과 함께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위원장 임명희)은 “2023년의 환경부는 대한민국 핵심 생태지역을 망가뜨리는 데에 앞장선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의당 도당은 오색케이블카 퇴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17

## “친환경 케이블카 만들어지길” 양양주민 환영

###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통과

김군수 “남은 절차 계획 구체화”  
오 의장 “우려 불식 문제보완주력”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로 좌초위기를 맞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27일 알려지면서 양양지역 주민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던 만큼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하 군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

다”며 “남은 절차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관련 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만 군의장은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가 다시 정상궤도에 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도민들과 18개 시·군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고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그동안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운석군이장연합회장은 “앞으로

주민의 오랜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미래 자연자원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일에도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철래 오색산도 추진단장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40여년간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가장 큰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제시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수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훈 choihoon@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04

## 오늘 강원특수교육원 건립지역 발표 '춘천 유력'

속보=춘천·원주·강릉 모두 강원특수교육원 유치전에 나서자 강원도교육청이 3곳에 각각 분원과 본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본지 2월 24일자 4면 등) 중인 가운데 28일 건립지역이 발표된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강원특수교육원 건립지역을 공식 발표한다.

강원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 과학부모·교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강원도내 1곳에 강원특수교육원을 설치하려 했으나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유치전이 거세지자 3곳에 각각 분원과 본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본원의 경우 도교육청 소재지인 춘천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원주와 강릉에는 본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이름만 분원과 분원이지 기능과 규모면에서 본원과 분원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 했다. 정민엽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07

## 27만명 다녀간 강원 웰니스 '의료' 날개 단다

강원 2020년 클러스터 선정 효과 관광객 10만명서 3년새 2.6배 ↑ 의료관광산업 결합 시너지 기대

강원도 웰니스관광산업이 의료관광산업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강원도가 사업지로 선정됐다. 강원도와 함께 대구·경북(2개 지자체 연계), 부산, 인천, 전북, 충북 등 6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웰니스는 웰빙, 행복, 운동의 합성어로 웰니스 관광은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이다. 문체부는

**강원/웰니스 중심형**

**■ 웰니스관광·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1 원주(한방), 동해(스파), 영월(자연회복), 평창(숲), 정선(명상) 등 대표 웰니스관광지 개발 및 육성

2 생활습관(의료), 빅데이터 사업 연계 의료-웰니스 데이터 축적 및 상품화

코로나19이후 높아진 건강·휴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웰니스와 의료의 융·복합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두 분야를 전략적으로 통합했다. 사업 대상지의 경우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으나 1개소당 지원액을 연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단년도에서 3

년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강원도는 매년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의료관광산업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 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분야다. 방한 외국인 환자 (49만 7000여명)

의 경제적 파급효과(2019년 기준)는 총 의료관광 지출액 3조 331억원, 생산 유발액 5조 5000억원, 취업 유발 인원 4만 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웰니스관광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건강과 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 산업이다. 강원도의 경우 2020년부터 3년간 웰니스관광산업을 육성한 결과도 내 웰니스 관광 관광객 유치 숫자가 2020년 10만 5000여명에서 지난해 27만 8000여명으로 2.6배 이상 증가했다. 백창석 도 문화관광국장은 "웰니스·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강원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국제관광시장을 선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해 해외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 江原日報

## 지자체·정치권·양양군민 공조에 尹 대통령 추진 의지 ‘시너지’

대선 7대 강원 공약... 김진태 지사도 지선서 조기 착공 약속  
이양수·권성동 의원 지원사격... 번영회聯·도민회도 앞장서

41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지자체, 정치권, 지역사회의 공조가 더해져 이뤄낸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7대 강원 공약에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영하고 ‘무조건 추진’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는 이어졌다. 지난해 말 김진태 지사로부터 연내 환경 협의 마무리 요청을 받은 뒤 국무총리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언급, 힘을 실었다. 김진태 지사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색케이블카 조기 추진을 공약하며 숙원 해결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당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정부부처를 찾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다.

정치권도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환곡소리를 냈다.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3일 춘천에서 열린 현장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강원권 현안으로 담아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구인 이양수 국회의원의 노력에 도내 정치권의 지원 사격도 더해졌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2015년 환경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대선 공약 반영에 힘썼다. 강원도의회는 오색사도설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냈다.  
양양군민을 비롯해 지역사회도 끊임없이 민심을 표출했다. 양양군민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오가며 항의 집회를 펼치면서 지역의 여론을 전했다. 시·군별 영회연합회와 도민회중앙회도 1만 5,0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힘을 보탰다. 정윤희기자 jyh89@kwnews.co.kr



◊양양 주민들과 한국지체장애연합회 회원 등 2,000여명이 2019년 8월27일 청역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민일보

## 유럽풍 테마 관광 빌리지 고성서 만난다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승인  
군,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탄력

프랑스 독일 등 유럽풍 테마 관광 빌리지가 고성에 들어선다.

강원도는 최근 고성 켄싱턴 설악밸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랜드파크

를 시행자로 오는 2031년까지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60번지 일원 89만4114㎡(약 26만평) 부지에서 스위스 테마로 운영 중인 리조트에 알프스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테마를 추가해 유럽풍 테마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총 1조1106억원이 투입된다.

군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가깝게는 울산 바위를, 멀리는 동해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관광숙박시설(1677실 규모)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스파, 알프스 테마 뮤지엄, 플로팅폴, 전망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동해안 북부권역을 대표하는 휴양문화관광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산

江原日報

2023 02 28 ( )  
04

## 건조한 날씨·강풍에 산불위험 최고조

5년간 9,772건 중 29% 봄 발생  
소방당국 화재예방 대책 적극 추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강풍이 몰아치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오후 1시3분께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의 밭에서 용접 중에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다가 출동한 산림·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7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산림 0.1ha가 불에 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44분께에는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화재가 나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가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창고 1동과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도내 화재사고는 총 9,772건으로 이 중 28.9%인 2,912건이 봄철(3~5월)에 발생했다. 봄철 화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11건이 발생, 연평균(582건)보다 29건 증가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49.8%), 전기적 요인(22.7%), 기계적 요인(12.4%) 순으로 많았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했다. 2018년부터 5년간 화재로 인한 796명의 인명피해 중 25.8%인 206

명이 봄철에 발생한 화재로 부상 등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강풍특보가 잦은 봄철 날씨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 담배꽂초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 등을 적극 예방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산림 인접 마을 주민 대상 비상소화장치 교육을 통해 초기 진압 성공률을 높이고 피난취약자 대상 지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 19

### 사회 안전망 총체적 점검 필요

-노인·장애인 생계난·사고대책 마련해야

사회·경제적약자 관련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극심한 경제난과 장애 가족들의 어려움은, 자살과 살인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실종과 사망사건도 빈번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통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소양호에 침수된 승용차에서 50대 아버지와 20대 발달장애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교통사고 흔적 등이 없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 지원이 미비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장애인 부모회 강원도지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실종과 안전사고도 적지 않아 안전망 구축이 절실합니다. 최근 실종

신고된 80대 어르신은 자택 인근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앞서 강릉시 영진 해변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만 숨졌습니다. 화천에서는 산약초를 구하기 위해 야산으로 올라간 80대 노인이 실종돼 관계당국이 수색을 벌였지만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동됐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독거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심각합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 지역 사회의 책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산과 정책적 대안, 주거 단위의 네트워크가 정밀하게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 과제로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02 28 ( )  
/ 19

## 오색케이블카 기대효과 부응하도록

-생태 훼손 우려 잠재우고 경제파급 내실 추진 다잡을 때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의 대표적 인봉우리중 하나인 끝정을 연결하는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면서 추진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어제(2월 27일)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를 있었습니다. 난제 중 난제로 꼽혔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으면 서 사업비 확보 및 후속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때 백지화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초 환경 훼손을 지적하며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말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협의 취소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해 승소를 끌어냈습니다. 국민권익위 인용 결정에 따라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재보완 요구를 했으며, 이에 따른 보완서류를 환경부 및 기상청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건부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동안 일곱 차례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여덟 번에 걸친 삭발투쟁 등을 겪으며 어렵게 거둔 성과여서 지역사회에서는 환영과 함께 기대감

이 남다릅니다. 그러나 100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후속적으로 백두대간 개발행위를 비롯한 10여 개의 인허가 절차와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향후 과제가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양군과 강원도는 각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26년으로 예정된 사업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요한 관문을 넘은 만큼 지금부터는 경제적 파급력을 확대해 사업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내실 있는 추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설치된 여러 지역의 케이블카 사업이 당초 예상한 경제적 기대효과와 달리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가 최대한 창출되는 내실 있는 투자 및 운영 방안 수립에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기자회견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성급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계적인 명물 사업으로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 공공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2 28 ( )  
/ 19

## 지자체 중 최초 탄소중립 선포, 속초시에 거는 기대

탄소중립 목표는 한국사회가 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이다. 탄소중립은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개념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탄소 사용은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탄소중립 대책이다. 2021년 미국이 기후변화 논의에 전격적으로 복귀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가속화되고, 탄소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핵심 시정 방향 중 하나인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의미 있다.

속초시는 지난 24일 기후행동플랫폼 전문기업인 ㈜원클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병선 속초시장과 박희원 원클 대표, 오대균 UN탄소시장 감독위원 겸 서울대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속초시와 원클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배출권 상쇄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각종 축제의 탄소중립

화, 속초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산림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거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거점이면서 탄소 저장고다. 물을 제공하는 수원지역이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공기정화기 역할을 한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휴양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효용 때문에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산림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하며 관리돼야 한다. 즉, 그 목적에 맞게 산림이 운영돼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산림은 벌채하지 않고 생물다양성이나 경관 유지를 위해 잘 보전해야 함은 물론이다.

반면 목재 생산이 주목적인 산림에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를 공급해야 하고, 다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숲을 가꿔야 한다. 어린 나무가 나이 든 나무보다 탄소 흡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더딘 나무는 목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 산림은 20년이 넘는 나무가 70% 이상이고 2050년에는 이들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3분의 1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속초시는 이를 잘 유념해 가장 모범적인 탄소중립 도시가 돼야 한다.

## 환경부 조건부 허가, 오색케이블카 성공하자면

41년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마침내 조건부로 허가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내년 봄 착공, 2026년 운영이 가능해졌으니 다행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산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원주환경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2020년 12월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인용재결하며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를 제출하며 이번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원주환경청은 이번에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 대책·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의 등을 요구했다. 또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착공 이전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 등도 제의했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케이블카=환경 파괴’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의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친환경 모델로 건설되는 오색케이블카는 개발과 환경 보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오색케이블카를 반드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에 조건부 동의 통보

### ‘케이블카=환경 파괴’ 인식 전환 계기

### 환경 보전·경제 살리기 공존 모범 사례 되기를

가 공존하는 귀중한 사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부터 오색케이블카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강원 관광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침체돼 있는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은 물론이고 속초항을 기점으로 한국·러시아·일본을 잇는 한국형 크루즈 관광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산악관광과 해양관광이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 모든 게 지자체의 몫이자 책무다.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에 팔을 걷어붙여야 마땅하다.